

공인탐정법으로 민관협력 치안

단 상



최순호
서울대지방대 탐정학과 주임교수

사회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조사의 역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의 연대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탐정들이 범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국민권익위·경찰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 제도처럼 회수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이미 금융사기 수사

에 막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둘째, 전직 경찰관 150만명의 수사·정보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법정 단체인 대한민국 경찰경우회 회원 수는 150만명. 이는 국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미국에서 은퇴한 FBI 요원이 민간조사업체에 참여하듯, 우리도 30여년간 축적된 수사 경험을 민관협력 치안 체계에 적극 연결해야 한다. 보이스포시ump 과약이나 대포통장 추적처럼 현장감각이 필요한 영역은 경험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셋째, 탐정 전문 교육과 자격체계를 구축해 민간조사의 질과 윤리를 표준화해야 한다.

교육·훈련 기반을 제도권 안에 구축하는 일은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뿐 아니라, 민관협력 치안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다.

더 이상 탐정 제도를 하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현대 사회의 범죄는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진화하고, 오늘의 보이스포시ump이 잠잠해지면 내일은 또 다른 유형이 등장한다.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이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

‘1조원의 피해 시대’,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때만 복잡한 범죄 환경을 돌파할 수 있다. 공인탐정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민관협력 치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제도적 발걸음이다. 지금이 그 문을 열어야 할 때다.

국민의힘 탐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탐원 계사관 논란에 칼을 빼든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말이 많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까지 호들갑이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특히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횡포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논란을 초래하는지는 지적도 있다.

일단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횡포에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역부족인데 굳이 지금 이 문제를 끄집어내어 분열을 초래할 필요가 있는지는 비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통일교 게이트와 정부 실책을 공격해야 할 시점에 자칫 내부 싸움에 매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은 당력을 모아야 할 때인데 조금 아깝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나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건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국힘 ‘당계 논란’ 가볍지 않다



아침햇살
고하승 주필

처음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한 전 대표의 가족 이름들 도용했을 것이라며 가볍게 여겼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탐무감사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보면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탐원 4명을 확인했는데, 이들은 모두 한 전 대표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였다. 특히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19일 사이 거의 동시에 탈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여권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드루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전 대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정계를 은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다.

설사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어려웠던 가족들이 탐원에서 욕을 줄 한 것이라고 해도 탐 대표답지 못한 행위로 역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실 ‘당계 논란’은 이렇게 확대될 문제가 아니라 일회성 해프닝으로 막을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국민과 탐원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탐무감사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탐을 뽐내기’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안타깝다’라고 반발하니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지만 이미 사과하고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늦은 것 같다.

아마도 탐무감사위는 탐 윤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로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셈이다.

탐원 내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하기조차 어려울 것이고 의도치 않게 정계 은퇴를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런 위기를 함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진한계 의원들을 동원하는 식으로 자칫하면 더더욱 상황이 악화될 뿐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 데 징계를 하는 것이라면 반발해야겠지만 ‘여론조작’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지금 경찰은 국민의힘 계사관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이할까.

기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



이상돈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적극행정 모의단원

지식재산 행정은 단순한 권리 부여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공공 신뢰를 동시에 지향하는 핵심 행정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청이 주관하는 ‘2025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형적 국정행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8개 사례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초고속사기 사행’과 ▲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민원 신고체계 적극 강화’이다. 두 사례는 각각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식재산 행정이 나아가야 할 적극행정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먼저 ‘수출촉진 초고속사기 사행’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영한 정책이다. 해외출원 여부가 기업의 투자·수출 전략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특히 등록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는 명백한 경쟁력 저하 요인이었다. 초고속사기 제도는 이러한 병목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심사 속도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돕는 전략적 적극행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민원 신고체계 적극 강화’ 사례는 공공행정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존의 신고 시스템이 가진 본인확인 구조, 접근성 한계, 소문 부족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정적 조치다.

특히 신고자와 감사 담당자 간의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한 점은 단순 접수 위주의 신고 시스템을 넘어 실질적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공익신고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제도적 파트너로 존중받는 행정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두 사례는 적극행정이 결코 일회성 아이디어나 홍보성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기업과 국민,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함께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적극행정은 신뢰를 얻는다.

특히 ‘지식재산청’에 속속들이 알려진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과 책임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지식재산청은 권리 심사 기관을 넘어, 산업·기술·창립·공정이라는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종합 정책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행정, 기업의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이 일상화될 때, 지식재산청의 적극행정은 선연이 아닌 문화로 정착될 것이다. 이번 우수사례들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지식재산청의 승격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와 산업 지원이라는 두 축의 적극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기를 바라며, 국민이 신뢰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에 이르는 시민의 힘

독자대표 (02)3676-2114

주최 (02)2926-0217

편집장 (02)3676-2114

FAX (02)762-8223

정치·행정부 (02)765-8115

경제·문화부 (02)926-0392

사회·수도본부 (02)926-0314

편집부 (02)926-0242

총무국 (02)926-0217

영입국 (02)926-0164

FAX (02)762-8223

광고문의 (02)926-0164

윤리팀 (03)2675-7956

발행·편집인 조순호

편집장 이명환

인사팀 정윤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994년 9월 25일 창간 - 2024년 6월 1일 제47년

2001년 10월 9일 등록번호 서울, 710028호 (1994)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0(여의도동, 국영VIF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